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2026년 업무계획 추진을 위한 현장 실행체계 점검 -
-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분야별 신속한 이행·성과 창출 지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12월 11일 진행한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드린 2026년 업무보고 내용이 현장에서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 실행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 지방 고용노동청장·지청장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붙임 2 참고)을 통해 “2026년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일하러 나가서 죽지 않고, 일하러 나가서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산재, 임금 체불, 2030 쉽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관서의 비상한 각오를 당부했다.

아울러, 12.15.(월)부터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 중 전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한 데 따른 조치이다. \* ①안전모 지급 및 착용, ②안전대 지급 및 착용, ③지게차 안전벨트 착용

이어, 본부는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추진계획(붙임 3 참고)’을 공유하고, 지방관서의 현장실행체계를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분기별 기관장 회의 및 수시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영범 (044-202-7026)
		담당자	서기관	남성욱 (044-202-7034)

**붙임 1****기관장 회의 개요**

- **일시:** '25.12.15.(월), 16:30~17:40
- **장소:** 세종 소회의실 및 e룸 - 지방관서(영상) - 서울청(영상)
- **참석자**
  - (본부) 장관(주재), 차관, 본부장, 전 실·국장 (주요 과장 배석)
  - (지방관서) 48개 청·지청장
- **안건**
  - (본부) '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12.11.)
  - (지방관서) '26년 청(대표지청)별 업무보고
- **진행계획**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간	세부내용	비고
16:30~16:35    5'	◆ 개회 및 장관 모두 발언	공개
16:35~16:50    15'	◆ (본부) '26년 업무보고 내용, 실별 전달·당부 사항	비공개
16:50~17:15    25'	◆ (지방관서) '25년 성과 및 '26년 중점 추진사항	
17:15~17:35    20'	◆ 토론	
17:35~17:40    5'	◆ 마무리 발언 및 폐회	

**[ 모두 발언 前 광주 도서관 사고 관련]**

-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광주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네 분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고인들의 명복을 깊이 빌며,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사고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고의 경위, 안전조치 이행 여부, 원·하청을 불문한 책임 소재를 끝까지 철저히 확인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오늘 기관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모두 발언]**

- 지난 11일, 대통령과 국민께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이제는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정부는 바뀌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 보고자료 첫 장의 이 문장은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2026년에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내야 합니다.
- 그 답은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 그리고 그 성장의 두 가지 열쇠는
  - ① 노동시장의 ‘격차’ 를 줄이는 것
  - ② ‘노동이 있는 대전환’ 을 이루는 것입니다.
- 내년은 노동이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부의 과제입니다.

- 새 정부 출범 후, 우리부는 노동과 생명 존중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①일하러 나가서 죽지 않고, ②일하러 나가서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③일하러 나가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 그러나, 줄지 않는 산재와 체불액, 70만 2030 씬 청년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뼈아픈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업무보고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본부에서는 법·제도적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방관서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셔야 하는 과제 중심으로 현장 실행 체계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 □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큰 사업장은 산재가 줄고 있지만, 작은 사업장의 위험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작은 사업장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큰 사업장은 예방의 주체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26년 감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더라도, 노동자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산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 오늘(12.15)부터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지급 및 착용 등 3대 기초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 체도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부터 감독관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사무공간 확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총원된 인력이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의 협력을 총동원하여 현장 말단까지 꼼꼼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산재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축 성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 대통령께 보고드린 “감독관은 노동자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말은 현장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여러분께 드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 □ “체불은 절도다”

체불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불을 관대하게 보았던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체불은 권리를 훔치는 행위, 절도입니다.
- 여러분의 노력으로 체불노동자 수가 감소하고 청산율도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체불액 자체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본부에서 상습·반복 체불 법정형 상향 및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임금구분지급제 등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관서도 이에 발 맞춰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체불노동자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 실질적 사용자와 하청노동자간 대화를 촉진하는 “개정 노조법 안착은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내년 3월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도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향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현장 노·사를 적극 지도해주시고,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일선 청장·지청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비정규직, 공무원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공공부문이 모범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동부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지방에서도 실태 파악과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의 자신 있는 ‘첫걸음’ 을 보장” 해야 합니다.

- 현재 우리는 ‘2030 씬 청년’ 70만 명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 이들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부가 70만명의 2030 씬 청년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 대학생, 제대군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 청년 DB를 조속히 구축하고 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훈련을 지원해야 합니다.
- 지방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긴밀하게 협업하여 발굴 - 접근 - 회복 수단계에 정부의 손길이 닿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전략목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중점과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청년세대 일할 기회 격차 해소</li> <li>❷ 노동시간 격차 해소</li> <li>❸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li> <li>❹ 임금·복지 격차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❺ 인구구조 변화 속 노동시장 참여 확대</li> <li>❻ AI 확산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전환</li> <li>❼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에 대응</li> <li>❽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❾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li> <li>❿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일터</li> <li>⓫ 스스로 지키는 참여형 일터 안전</li> <li>⓬ 외국인노동자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li> </ul>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장 밀착</b> 현장 이해관계자의 소통·참여를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 * (예) 울산발전소붕괴사고 관련, 발전소 타워 4·6호기 해체를 유가족과 함께 결정 등</li> <li>· <b>맞춤 실행</b> 문제의 원인을 대상별로 촘촘히 진단하여 대책 마련 * (예) 상습체불 사업주: <sup>원인</sup> 낮은 처벌수준으로 임금체불을 통한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인식 → <sup>대책</sup> 제재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의 비용을 높여 경각심 제고</li> <li>· <b>성과 체감</b> 데이터 기반의 체감도 높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사례를 발굴·전파하여 만족도 제고</li> </ul>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현장 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li> <li>· 관계부처+지방정부+민간이 협업</li> </ul>		